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 259-12 3층 T.02-778-4001. F.02-778-4006 pssp@jinbo.net http://www.pssp.org

2015년 8월 2주차 보건의료동향분석

2015년 8월 10일 ~ 2015년 8월 29일

주요 키워드

1. **간호인력/포괄간호서비스** : 간협 “간호인력 개편 입법예고 원천 무효” (8. 22)
2. **정진엽 장관** : “정진엽 분당서울대병원장 재임시 비급여·비정규직 확대…의료IT 투자 집중” 김성주 의원 “의료IT 분야 이외는 총체적 낙제점” (8. 24)
3. **기타** : “직장인 건보료 폭탄 소동 없앤다”연합뉴스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건보료 당월 보수 부과방식 도입” (8. 17)/“감염관리 잘하는 병원에는 인센티브” 보건복지부 의료관련감염 방지대책안 발표 ... 격리병실 확충·포괄간호서비스 조기 시행 (8. 18)

1. 보건의료정책

○ “정진엽 분당서울대병원장 재임시 비급여·비정규직 확대…의료IT 투자 집중” 김성주 의원 “의료IT 분야 이외는 총체적 낙제점” (8. 24)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유일한 행정경험으로 제시한 분당서울대병원장 재직 당시 의료IT 분야의 선도병원으로 육성하려 했던 것 외에는 국공립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김성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열린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분당서울대병원장 재직시 ▲과도한 진료비 부당청구가 발생했던 점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국립대병원에 걸맞지 않은 불명예를 얻었던 점 ▲병원업무의 외주화 및 비정규직 확대를 이끈 점 ▲총체적인 경영상의 문제를 안은 채 윌스케어사업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온 점 등을 지적하며 복지부장관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김성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정진엽 후보자의 분당서울대병원장 재직시절(2008년~2013년) 진료비 부당청구 환수 현황을 보면 복지부 실사를 통한 비급여환자 과다부담금 7억3,000만원, 본인부담금 사전상한액 초과금 착오청구 2,100만원, 초재진 진찰료 중복청구 3,700만원, 기타 타보험 중복청구, 예약취소 착오청구 등 1,300만원 등으로 총 8억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국립대병원으로서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공의료의 모범이 돼야 함에도 후보자 재직기간 동안 진료비 부당청구가 8억원에 달했다는 것은 후보자가 국공립병원의 수장으로서의 의무와 역할을 방기하고 수익에 몰두한 병원경영을 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후보자의 병원장 재직기간 동안 병원업무의 외주화 전환도 상당수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분당서울대병원의 직간접고용을 포함한 비정규직은 2008년 973명에서 2013년 1,680명으로 72%가 증가했고, 정규직원 대비 비정규직 비율은 2008년 36.5%에서 2013년 40.8%까지 확대됐다.

김 의원은 “후보자는 숙련된 업무와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할 지속적 성격의 병원업무들을 인건비 절감이라는 이유로 외주화하고 비정규직 확대를 승인함으로써 메르스 사태와 같은 병원내 감염에 대한 예

방·관리 대책을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의 병원장 재임기간 동안 분당서울대병원의 비급여 수익은 2008년 763억원에서 2013년 1,167 억원으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비급여 항목 수익 극대화는 민간 대형병원의 전형적인 실적위주 수익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는 국립대병원장으로서 이 같은 흐름에 동조해 비급여수익에 열을 올렸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정 후보자가 병원장 재임기간 동안 유헬스 및 의료IT 융합사업 분야에 총 35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증진센터 모바일 진료안내시스템 구축 용역, i-Pad 및 모바일 오피스 구축, 클라우드 기반의 VDI 시스템 구축용역, 모바일 단말기 보안 시스템 구축, 스마트 베드사이트 스테이션 구축 용역 등 개인의료정보를 활용한 원격의료시스템 구축 부문의 투자에 집중됐다.

김성주 의원은 “후보자가 병원장이었던 시기의 분당서울대병원은 과연 국립대병원이었는지 아니면 ‘의료IT 육성 시범사업병원’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의료IT 분야 선도병원으로 분당서울대병원을 이끄는 데 혼신을 다했던 후보자, 그리고 유일한 행정경험인 병원장으로서의 역할마저 다하지 못한 후보자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와 복지를 총괄하는 부처의 장관이 된다는 것은 결코 마땅치 않다”고 지적했다.

○ 정진엽 “의료 영리화는 반대, 영리 병원은 OK” [인사청문회] 제자 논문 표절 의혹엔 “행정적 실수” (8. 25)

○ 복지부, 달빛 어린이병원 30곳으로 확대 (8. 10)

보건복지부는 10일 소아환자가 야간이나 휴일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달빛 어린이병원을 30곳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9개 병원을 대상으로 달빛 어린이병원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올해 2월에는 6 곳을 추가로 선정해 총 15개의 달빛 어린이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에는 5곳을 추가로 지정해 총 20개의 달빛 어린이병원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진료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15곳을 추가 지정, 총 30개 달빛 어린이병원을 운영키로 했다.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되면 연간 평균 1억8000만원의 보조금(월평균 15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달빛 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하는 의사의 야간·휴일진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3개 이내 병·의원이 연합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달빛 어린이병원 추가공모에 신청할 병의원은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오는 9월 11일 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며 “9월 중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한 후 올해 말부터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정부, 의료수출·원격의료 확대 제도화에 올인할 듯 경제관계장관회의서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추진계획 확정 (8. 13)

정부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과 원격의료 확대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2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제시한 정책방향의 후속조치를 담은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정부는 3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련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의료공공성 약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 법안이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대안은 ▲서비스산업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지 않고, 법률에서 명확히 정의하고 ▲의료인의 의무, 의료기관 개설 및 부대사업 등 보건의료 공공성 관련 분야를 법률에 명시하고 서비스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외국인 환자 유치와 의료 해외진출 등 의료서비스 산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데 제도적 기반이 되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국회 통과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7년까지 6조원의 부가가치와 약 11만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유망서비스산업 분야별 주요과제 및 후속조치로 ▲원격의료 적용범위 확대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격의료와 관련해서는 도서벽지와 원양선박, 군부대, 교정시설 등 특수지원격의료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올해 11~12월까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 효과성과 안전성 검증을 마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 중 의료인 간 원격협진 수가 도입도 병행하기로 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올해 12월 중 빅데이터 활용기반 구축방안 마련 및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빅데이터 서비스 모델 개발, 새로운 연계 데이터셋 개발 등 R&D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 “직장인 건보료 폭탄 소동 없앤다” 연합뉴스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건보료 당월 보수 부과방식 도입” (8. 17)

매년 4월이면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돼 온 직장인 건강보험료 폭탄 소동이 내년엔 상당히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연합뉴스는 17일 “건강보험당국이 정산방식 대신 당월 보수에 보험료를 매기는 쪽으로 보험료 부과방식을 바꾸기로 했다”며 “건보료 당월 부과 방식을 우선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도입하되 적용 대상 기업을 100인 이하 사업장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인용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6년 1월 1일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은 호봉승급이나 임금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임직원의 당월 보수가 변경되면 건강보험공단이나 담당지사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이런 내용을 담은 ‘직장 가입자 보수월액 변경 신고 의무화 안내문’을 각 사업장에 발송하고 인터넷 홈페이지(www.nhis.or.kr)에도 올렸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건보공단은 내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변동된 당월 보수에 보험료를 부과해 거둘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이나 퇴직정산 과정에서 과도한 정산 보험료가 발생해 재정적 부담을 주는 일을 줄인다는 방침.

이렇게 되면 2013년 기준으로 총 133만개 사업장 중에서 100인 이상 사업장 1만4785곳(1.1%)에서 일하는 직장가입자 542만명이 매년 4월 건보료 정산으로 정산 보험료를 더 내거나 돌려받는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될 것으로 건보공단은 내다봤다고 연합뉴스는 밝혔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원래 당월 보수액에 보험료를 곱해 산출하고 절반은 근로자가, 나머지 절반은 사용자가 부담하게 돼 있다.

따라서 호봉이나 월급이 오르고 성과 보너스를 받아서 당월 보수액이 변동되면 변동된 보수액에 맞게 건강보험료도 달라져야 마땅하다. 하지만, 그러려면 사업장은 임직원의 보수월액이 바뀔 때마다 일일이 그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의 건강보험 업무 부담이 만만찮다.

그래서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이런 사업장의 행정부담을 덜어주고자 2000년부터 직장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먼저 부과하고, 매년 4월에 실제 보수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정산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연말정산에 이어 건보료 정산으로 정산 보험료가 많이 나오면서 마치 보험료가 추가로 인상되는 것처럼 비쳤다.

또 한꺼번에 많은 정산 보험료를 내야 하는 직장인들은 4월 월급봉투가 그만큼 줄어들면서 분통을 터뜨리는 일이 해마다 4월이면 벌어졌다.

○ “감염관리 잘하는 병원에는 인센티브” 보건복지부 의료관련감염 방지대책안 발표 ... 격리병실 확충·포괄간호서비스 조기 시행 (8. 18)

앞으로 정부가 일선 병원의 감염 관리 수준을 평가해 “열심히 잘 하는”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병원마다 음압격리병상을 대폭 확충하고, 병원내 감염의 원흉으로 꼽힌 ‘복적이는 병실’은 ‘포괄간호

서비스'의 조기 시행 등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관련감염 방지대책(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국제 수준'에 맞춘 감염 관리 평가 항목에 따라 각 병원의 감염관리 인프라 수준을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이 평가 결과에 따라 건강보험 보상을 강화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상급종합병원 또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는 일정 수의 격리병실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에 따라 음압 병상 등이 대폭 확충될 전망이다.

'포괄간호서비스'는 조기에 확대한다. 포괄간호서비스는 병실에 별도의 보호자가 없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전문 간호 요원이 환자의 간병을 책임지는 제도다. 현재는 일부 병원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이 서비스 시행에 필요한 추가 간호 인력은, 현재 일터를 떠난 간호사들의 재취업을 도와 확충하겠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는 또 병원의 6인실 보유 의무를 폐지하고, 신설 병원의 경우 입원실 병상 수를 4개로 제한해 병상 사이 거리를 국제 수준으로 넓히는 등 입원실 환경도 개선하기로 했다. 소위 '빅5' 등 서울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일을 방지하도록,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고, 전국의 병원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감염 발생 실태 조사를 벌여 소아 중환자나 투석 환자 등의 감염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등의 방안도 마련했다.

복지부는 18일 열리는 '국가방역체계 개편 방안'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공청회에서는 학계·현장 전문가, 언론인, 당국자 등이 메르스의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여기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는 다음달 초 '국가 방역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 '복수의료기관 개설금지 완화법안' 발의 (8. 19)

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금지 규정을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나왔다. 다만 이 법안은 의사나 한의사 등이 자신의 면허와는 상관이 없는 의료기관의 이사로 참가해 운영까지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어서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은 의료인이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설치 및 운영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을 고쳐, 자신의 면허로 개설할 수 없는 의료법인의 임원으로 재직 및 개설·운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어떠한 명목으로든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혹은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사가 한의원의 임원으로서 의료기관을 개설 및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오제세 의원은 "의료인이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 외에,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이사로서 자신의 의료면허로는 개설할 수 없는 새로운 의료기관의 운영에 참여한 경우에도 이를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의료면허와 관련되지 않은 사안에서는 비의료인과 같은 권리 및 의무를 가지는 것으로 봐야한다"며 "면허범위를 벗어나 자신이 직접 개설하거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의료기관의 운영까지 금지하는 것은 입법 목적에 비춰 과도한 규제"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로 개설할 수 없는 의료기관인 경우에는 법인의 이사로서 개설 및 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게 된다"며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해당 개정안이 발의될 경우, 한의사가 요양병원의 이사로 참여하거나 의사가 한의원을 대리 운영하며 돈을 버는 '변종 사무장병원' 운영이 가능해진다는 단점도 있어 법안이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 국립중앙의료원, 통일대비 공공의료 심포지엄 개최 (8. 20)

○ 교황이 인천성모병원 사태를 본다면 무슨 말을 할까...천주교 인천교구서도 병원 상황에 주목...보건노조 "진전된 조치 없으면 9월초 교황청 방문 추진" (8. 20)

노동조합 지부장에 대한 집단괴롭힘과 노조 활동 탄압, 직원들을 환자유치로 내모는 돈벌이 경영 등으

로 비난을 사고 있는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사태에 마침내 천주교 인천교구가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특히 인천성모병원을 운영하는 천주교 인천교구 차원에서 오늘(20일) 오전 병원에 관한 논의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전국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9일 오후 2시부터 인천성모병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병원의 무책임하고 비도덕적인 경영 실태를 규탄했다. 병원 앞 집회에 이어 인천교구(담동성당)를 찾아가 투쟁결의대회를 열고 인천성모병원 사태의 책임과 해결을 요구하고 최기산 주교와의 면담을 요청했다. 그러나 주교 면담은 성사되지 않았고, 대신 인천교구 사무처장인 안규태 신부와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 홍명옥 인천성모병원 노조지부장, 인천지역연대 양승조 상임대표 등이 면담을 했다.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은 "사무처장, 관리국장 신부 등과 면담을 통해 인천성모병원 사태에 대한 노조 측의 입장과 요구를 전달했다"며 "인천교구에서도 이러한 문제제기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면담에서 인천교구 측에 ▲인천성모병원의 돈벌이 경영 중단 ▲홍명옥 노조지부장 집단괴롭힘 관계자 처벌 ▲노조활동 보장 ▲인천성모병원 사태에 책임 있는 인천교구에서 파견한 신부 퇴진 등을 요구했다.

박 부위원장은 "특히 20일 오전에 인천교구 주교께서 국장 신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인천성모병원에 관한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혀 방생농성을 일단 철수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인천교구에서 진정성 있는 조치나 답변이 없을 경우 교황청을 방문해 교황 면담도 요구할 방침이다. 보건의료노조는 2002년 가톨릭중앙의료원에서 200일 넘는 장기파업과 노조탄압 사태가 벌어지자 교황청을 방문해 교황 면담을 요구하는 원정농성을 벌인 적도 있다.

박 부위원장은 "8월 말까지 인천교구에서 진전된 조치가 없을 경우 9월 초 교황청을 방문해 프란치스코 교황 면담을 추진하고, 인천성모병원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알리겠다"고 말했다.

인천성모병원 노조탄압과 국제성모병원의 부당청구 및 불법 환자유치 사건이 알려지고 비난여론이 고조되면서 근 인천교구와 지역내 가톨릭 신자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인천성모병원에서 있었던 노조지부장 괴롭힘 사건과 직원들을 환자유치 활동에 내모는 일이 알려지면서 지역내 여론도 많이 악화되고 있다"며 "특히 인천교구 내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보이는 신부가 많아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오늘(20일) 오후 2시 인천YWCA에서 '인천성모병원 돈벌이 경영 및 노동·인권 탄압 행태 폭로' 기자회견담회를 개최한다. 기자회견에는 인천성모병원 노조 홍명옥 지부장이 참석해 병원의 돈벌이 경영, 노동·인권탄압 실태 등을 폭로할 예정이다.

○ 간호인력 '간호사·1~2급 간호지원사' 체계로 개편 복지부,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간호조무사를 간호지원사로 변경 (8. 20)

현행 간호조무사 명칭을 '간호지원사'로 바꾸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허와 자격을 부여해 수급·양성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간호사-간호조무사'로 2단계인 간호인력 체계도 '간호사-1급 간호지원사-2급 간호지원사' 3단계로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포괄간호서비스 조기 확대와 부족한 간호인력 질 관리 강화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마련 21일부터 9월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명칭이 간호지원사로 변경되고 교육수준과 업무범위에 따라 1급 간호지원사와 2급 간호지원사로 구분된다. 그간 시도지사가 자격을 부여하고 있어 질관리와 수급조절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1급은 복지부장관 면허, 2급은 복지부장관 자격을 부여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급·양성 관리를 강화한다. 현재의 간호조무사는 2급 간호지원사로 전환되며 의료기관 근무경력, 교육과정 등을 거친 경우 1급 간호지원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얻는다.

개정안은 또 간호사와 간호지원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내용도 담았다.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역할이 명확지 않아 효율적 업무 수행이 어렵고 환자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간호지원사는 간호사의 지도 아래 간호업무를 보조(의원급 의료기관은 예외)하되 간호계획의 수립, 환자의 보건위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는 수행할 수 없도록 했다.

간호인력 질 관리를 위해 간호지원사 응시자격도 강화된다. 간호지원사 양성 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제도를 도입해 교육과정 및 시간, 실습교육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평가인증을 받은 교육기관을 졸업한 경우에만 간호지원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간호지원사에 대해서도 면허(자격)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보수교육도 의무화해 배출된 인력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2013년 1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운영한 '간호인력 체계 개편 협의체'에서 마련한 개편안을 반영한 것이다.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관련 단체인 간호인력 역할분담, 평가인증을 통한 질 관리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면허·자격, 명칭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복지부는 "국민에게 양질의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다수안을 토대로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과 별도로 부족한 간호사를 확보하기 위해 유휴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그간 간호인력난 해소를 위해 간호대학 정원을 2007년 1만1천명에서 2015년에는 1만9천명 수준까지 지속적으로 늘렸지만 유휴간호사의 비중이 높아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는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로 간호사 면허등록자 총 32만명 중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인력은 15만명으로 45% 수준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9월부터 전국 6개 권역에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유휴간호사에 대한 교육과 훈련, 의료기관 취업도 앞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한국적 병간호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포괄간호서비스의 조속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간호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면서 "간호인력 간 체계적인 역할 분담 및 질 관리 강화와 유휴인력 활용을 통해 포괄간호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 보건의료산업/기술

○ 아시아나항공, 부산광역시와 의료관광 활성화 위한 MOU (8. 25)

아시아나항공이 25일 부산광역시와 '의료관광 및 홍보사업 등의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부산광역시청에서 실시된 이날 협약식에는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사장과 서병수 부산광역시장의 참석하였으며, 양측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외수요 유치 및 홍보활동에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위해 아시아나는 국내외 전 지점에 부산시의 의료관광 상품을 안내하는 홍보물을 비치하고, 이를 통해 부산을 방문하는 기관이나 개인에 대해 항공료 할인 등의 우대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시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시 아시아나 운항편을 우선 이용하는 한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아시아나의 활동에 대해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아시아나항공 김수천 사장은, "아시아나항공이 부산시와 손을 맞잡고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는 것에 긍지와 자부심을 느낀다"며, "부산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아시아나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나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의료기관과의 업무제휴를 지속 진행해오고 있으며, 현재 연세의료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카톨릭 중앙의료원 등 9개 제휴기관 및 그 산하 26개 병원과 의료관광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모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3. 제약업계

○ 복지부, 'First-in-Class' 신약 개발 본격 지원 10월 중 업체선정, 11월 사업 시행 ... "4~5년 내 신약개발 성과 도출 목표" (8. 27)

보건복지부가 '퍼스트-인-클래스'(First-in-Class) 신약 개발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복지부는 최근 '미래 제약·바이오 10대 특화 유망 분야 지원 시행계획안'을 마련, 오는 10월 중으로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11월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미래 제약·바이오 분야에 특화된 ‘퍼스트-인-클래스’(First-in-Class) 신약 개발을 위한 후보물질 도출에서 임상연구까지 컨소시엄 연구개발을 지원해 4~5년 안에 신약 개발 상용화 성과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제약산업은 현재까지 25개 국산 신약을 보유하고 있지만 블록버스터급 퍼스트-인-클래스 신약 성과는 전무한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퍼스트-인-클래스 신약 창출과 R&D 생산성 증대를 위해 유기적 산·학·연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미충족 수요가 높은 특화 분야에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10대 특화 분야 가운데 신경계질환 치료제, 당뇨 및 대사질환 치료제, 면역치료제, 심혈관계질환 치료제, 항암제, 희귀질환 치료제 등 6개 분야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항암제, 항바이러스제, 바이오시밀러, 줄기세포 치료제 등 4개 분야는 이번 지원 사업에서 제외됐다. 지원 규모는 과제당 연간 최대 10억원이며 지원 기간은 최장 5년이다.

지원 범위는 퍼스트-인-클래스 수준의 신약 후보물질 도출연구, 비임상 연구 및 임상 연구다. 다만, 기술성숙도(TRL, Technology Readiness Level)가 2~7 범위 내여야 한다. 기술성숙도는 해당 기술이 어느 정도 개발됐는지 평가하는 지표다. 지원 대상은 국내 제약기업 주도의 산업계·학계·연구분야·병원 컨소시엄이다.

컨소시엄의 주관 연구기관은 국내 제약기업(벤처 포함)이어야 하며, 세부연구기관으로 대학이나 병원, 출연 연구소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세부연구기관은 기관 내에 제약기업과 협력할 수 있는 연구센터를 구축해야 하고 제약기업은 센터에 신약개발 전문 인력을 파견해야 한다.

4. 의업단체

○ 간무협, 포괄간호병동 간호조무사 고용문제 국회차원서 해결 추진은수미 국회의원, 포괄간호 문제 국회 간담회 및 국감 의제 채택 추진 (8. 19)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19일 오후 3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국회의원을 만나 포괄간호병동 간호조무사 고용문제 및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은수미 의원은 포괄간호병동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고, 국회차원에서 간호조무사의 고용문제 등의 해결을 약속했다고 간무협이 전했다.

은 의원은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며 조만간에 국회에서 간담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정감사 의제 채택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간무협은 지난 7월 16일 ‘포괄간호병원 간호조무사 고용대책 회원간담회’, 8월 13일 ‘세종병원 포괄간호병동 회원 간담회’ 등을 통해 포괄간호제도의 문제점 파악과 제도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간무협은 “지난 2013년부터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해온 포괄간호병원에서 2년 계약만료를 이유로 일자리를 잃고 쫓겨나는 간호조무사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포괄간호병동을 운영하고 있는 S병원의 경우 2년 계약이 종료되면 퇴사시키고 2개월 후에 다시 채용하면서 종전 임금의 85% 수준으로 삭감하는데다, 처음 2개월동안에는 수습기간이라는 명목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구분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하는 일이 너무 광범위하고 간호조무사 1명이 환자 30명을 돌본다고 하나 실제로는 최대 55명까지 담당하는 등 비인간적인 상황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현재 걸음으로 드러나는 포괄간호는 현장과 괴리가 크며 현장에서 일어나는 인간 이하의 근무조건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제2, 3의 메르스에 대비하기는커녕 간호서비스의 질을 기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홍 회장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포괄병동에 근무하는 젊은 간호조무사에게 왜 그런 일을 하고 있는냐는 사회적 인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일자리 창출에 아무 의미가 없다”며 “포괄간호병동이 젊은 사람들에게 선호하는 일자리가 되어야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간무협은 고용문제 해결과 함께 포괄간호병동 정규직 채용 의무화와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수가 차등화 그리고 간호인력간 적정 업무 및 적정 인력 배치 등 포괄간호 제도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 간협 “간호인력 개편 입법예고 원천 무효” (8. 22)

대한간호협회(간협, 회장 김옥수)가 2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인력개편안 입법예고에 ‘원천 무효’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간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간호조무사 제도 폐지’를 전제로 시작된 간호인력 개편의 기본원칙을 망각하고 지난 2년 여간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의 논의결과를 무시한 채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며 “결사항전의 자세로 반대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간호인력 개편안의 취지가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 간 업무 구분, 간호조무사 제도 폐지 등이었으나 복지부가 기존의 간호조무사를 간호지원사로 자동 전환하고 면허까지 부여해 간호인력 개편의 ‘원칙’을 망각했다는 것이다.

간협은 “보건복지부는 1973년부터 의료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간호조무사에게 간호사의 진료보조업무를 허용해 간호사를 대·충당하는 인력이 되게 함으로써 비상식적인 상황이 40여 년간 지속돼 간호서비스 질 저하와 환자안전에 위해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호인력 개편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 간호보조인력은 의료기관의 종류를 막론하고 위임된 간호보조업무를 하는 것이어야만 함에도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 간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는 본래의 취지가 퇴색된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며 “보건복지부는 환자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간협은 또 이번 개정안이 간호보조인력 질 관리의 핵심인 평가인증, 보수교육 등을 모두 하위법령에 위임한 껍데기 법안이라고 꼬집으며 “협회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집회·시위 등 모든 투쟁을 앞으로 전개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간협은 오는 26일 오후 복지부 앞에서 항의집회를 가진다는 방침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3년부터 간호인력 체계 개편을 위해 간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들과 논의를 지속했으며 21일 간호조무사를 ‘1·2급 간호지원사’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 의협 “임시 공휴일 진료비 의료계 희생 강요” “손실 다 떠안으라는 꼴 … 손실분은 공단서 부담해야” (8. 11)

최근 보건복지부가 임시공휴일인 8월14일 진료비를 공휴 가산금이 붙지 않은 평일 진료비로 받도록 하는 방침을 발표한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가 거세게 비판했다.

의협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공휴 가산금으로 인해 발생할 국민의 의료비 부담과 불편, 민원을 해소하겠다는 뜻은 이해한다”면서도 “증가 차액분에 대한 손실을 해당 의료기관에서 고스란히 감당하려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생색은 다 내면서 실제적으로는 이로 인한 손실과 피해를 의료기관이 모두 떠안으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메르스 여파로 의료기관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고 피해와 후유증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과 배려는커녕, 환자본인부담 증가액을 평일과 같은 수준으로 받도록 관련단체들이 적극 협조했다고 언론에 발표한 것은 정책적 왜곡”이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의료기관들이 공휴 가산금을 받지 못하는 금액만큼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으로 각 의료기관에 지급해야 한다면서 “진료비 부담금의 비율 및 수가가산정책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세부고시, 즉 법적으로 정해진 바 할인과 면제의 대상이 아님을 망각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부는 최근 임시공휴일에 의료기관이 진료를 시행할 경우 환자가 부담하는 공휴가산금(평일 대비 130%)을 받지 않도록 하는 대신 건보공단의 부담금은 130%로 지급하는 내용의 공문을 의협 등 의료단체에 전달했으며, 의료단체들이 정부의 뜻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 의료계 “개인정보보호, 책임 전가 말라” 정부에 ‘일침’“의료정보 유출 주범은 약정원·의료정보기업 … 전자의무기록 관리방안도 문제” (8. 13)

심평원이 최근 벌어진 의료정보 수집 및 판매 건의 후속 조치로 의료기관에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및 의료인 대상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특별시 의사사회(회장 김숙희)가 강하게 반발했다. 사건의 주범이 의료정보프로그램 제공업체와 약학정보원임에도 정부가 의료인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의사사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의 질병정보 보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번 정부와 심평원의 조치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사건의 주범은 약학정보원 및 의료정보 관련 기업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정작 개인정보 보호 교육과 실태 점검을 받는 것은 의료기관에 국한돼 있다”고 비판했다. 또 “심평원이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 교육 일정을 의료기관의 진료시간대인 평일 오후1시, 4시로 잡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실질적인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료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행정편의주의 및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며 “대국민 진료에 나서고 있는 의료 기관들에 대한 진료 방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관 개선방안’은 환자 개인정보 보호라는 입장과 달리 해당 정보를 더욱 유출되기 쉽게 만들었다는 것이 서울시의사회의 주장이다.

서울시의사사회는 “환자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근본 목적의 실현을 위해, 전자의무기록을 의료기관 외의 서버에 별도 보관 및 사기업 운영 소프트웨어 판매 계획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명확히 반대한다”며 “환자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하면서도 의료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의료기관의 행정지원에 대한 제반 비용을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선결되어야 함을 재차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 병협 “정진업 장관 환영 … 의료계 혁신 추진해달라” (8. 28)

5. 질병/기타

○ 청주 ‘지게차 사망사고’ 업체 관계자 소환 조사 (8. 21)

지난달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지게차 사망사고’와 관련해 해당 업체 관계자가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사건을 수사하는 청주 청원경찰서는 전날 오후 해당 업체 관계자 A(34)씨 등 4명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과실여부 등을 조사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사고 발생 당시 이들이 지게차에 치인 동료 이모(35)씨를 어떻게 조치했는지 등 사고 발생부터 병원으로 옮기기까지 모든 과정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에는 사고 발생 후 119에 신고한 뒤 다시 자신들의 지정병원을 부르겠다고 구급대를 돌려보낸 관계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숨진 이씨의 부검 결과가 나온 대로 업체 대표도 소환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이씨를 지게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김모(37)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사고조치 과정에서 과실 부분이 확인되면 업체 대표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이 업체는 지난해도 산업재해 3건이 발생했지만, 관계기관에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이 지난 12일 해당 업체에 대한 감독을 벌여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이 중에는 숨진 이씨가 지난해 1월에도 지게차에 치여 중상을 입고, 석 달 동안이나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월 29일 오후 1시45분께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의 한 화장품제조공장에서 작업하던 이씨가 김씨가 몰던 지게차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신고를 받은 119구급대는 사고 발생 7분 후 현장에 도착했지만, 회사 측에서 자신들의 지정병원을 부르겠다고 이를 돌려보냈다.

지정병원 구급차 도착도 지체되면서 결국 이씨는 회사 승합차에 실려 1시간가량 지나서야 지정병원으

로 옮겨졌다. 그러나 이 지정병원은 정형외과 전문 병원으로 장기 손상을 치료할 능력이 없어 이씨는 다시 인근 다른 종합병원으로 이송됐다. 시간이 지체되면서 이씨는 다발성 장기 손상에 따른 복부 내과다출혈로 결국 사망했다.

유족들은 응급 의료진을 통해 빨리 병원으로 옮겨졌다면 살 수 있었다며 회사 대표 등을 업무상과실치사로 고소했다.

○ 안전장치 없었다…지게차 사고, 결국 '예고된 인재' (8. 27)

지난주 JTBC가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린 청주 지게차 사고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노동청은 해당업체 대표를 불구속 입건했고, 경찰은 회사 안전관리 담당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예고된 인재'였다는 겁니다.

[청주 지게차 사고 CCTV 화면입니다. 물건이 가득 쌓인 길 사이로 지게차가 빠른 속도로 지나가며 이모 씨를칩니다. 작업자들이 다닐 수 있는 통로는 아예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지게차의 동선을 안내하는 작업자도 배치하지 않았고, 화물 과적으로 운전자 시야도 가렸습니다.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회사가 10건이 넘는 안전 법규를 위반했다며, 대표 전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도 사고 현장에 있던 회사 관계자를 불러 119를 돌려보낸 이유를 집중 추궁한 데 이어, 전씨와 안전관리 팀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사고 당시 근무 직원 : 위에 사고 났어요 그러더라고. 지금 119 온대서 가봐야 해요 하더니 거기(사고 현장) 올라가는데 앞에서 막더라, 내려가시라고.]

[노동계는 오늘 특별감독을 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을 방문해 업체의 조직적인 은폐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